

# 뚝 끊긴 발길 '도심 썰렁'... 불꺼진 유흥가 '암흑의 밤'

‘광주 100시간’ 멈춤 현상 보니

코로나 확산 방지 시민 이동 자제  
구시청사거리·상무지구 등 적막  
대목 농친 가게들 한숨만 가득  
일부 배달 가게 문 열었지만 한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주말 광주 도심은 썰렁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3일부터 몰려온 고 3 수험생들로 발 디딜 틈 없었음에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광주시의 '이동 멈춤' 요청을 잘 따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유흥주점·클럽·댄스홀·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층에 대한 영업이 중단된데다, 음식점과 각종 술집들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한 광주시의 '100시간 멈춤' 지침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광주시는 수능 이후 광주 도심에 수험생들이 몰릴 것을 우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3일 새벽 0시부터 6일까지 4일간 '100시간 멈춤' 지침을 전격 시행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5일 밤 들러본 광주 대표 유흥가인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와 상무지구는 텅 빈 모습을 연출했다.

젊은층들로 주말이면 북적대는 상무지구와 동구 구시청 일대는 대부분 음식점·술집 식당이 문을 닫고 네온사인을 끄면서 '어둠의 도시' (?)를 방불케



10월 도심...그리고 12월

광주시 동구 구시청의 한 유명주점 근처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지난 10월 31일 밤 헬러런 데이를 즐기려 온 젊은이들로 가득 찼지만, 100시간 멈춤이 시행된 지난 5일 밤 같은 장소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가게도 불만 켜진 채 문은 닫혀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했다. 코로나에도,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 턱스크를 하거나 코를 내놓은 마스크를 걸친 젊은층들로 북적했던 헌팅포차·감성포차 등 술집들도 문을 닫아 썰렁했다. 고작 편의점과 배달·포장 전문 식당 몇 곳만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찾는 손님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동구 구시청 인근에서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은 "6개월동안 일했는데, 밤 9시 이후 이렇게 찾는 손님이 없진 처음"이라며 "손님이 없어 편하긴 하지만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구지역 한 족발집 주인은 "가게를 닫지는 못해 문을 열긴 했는데 3시간 동안 배달 주문은 5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 해장국집 주인도 "포장 손님보다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은데 9시 이후 장사를 할 수 없어 타격이 심하다"면서 "수능 끝난 이 때가 대목인데 사람

이하나 없다"고 한탄했다. 서구 상무지구 일대로 범벅했다.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로 거리를 들썩거리는 음악 소리가 꺼졌고 화려한 간판·네온사인은 사라졌다. 음식 배달 오토바이만 오갈 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딱딱딱 붙어있던 헌팅포차 앞 대기행렬도, 술을 먹고 귀가하려는 손님을 태우려고 줄 서 있던 택시들도 모습을 감췄다. 치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여·58)씨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가능하다고 안내하니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았다"면서 "밤 9시에서 밤 12시로 영업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술 손님 입장에서 밤 12시까지 먹는 것이나 새벽 2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책상머리에서나 정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말했다. 밤 9시~10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면 밤 12시나 새벽 2시를 제한하는 것은 방역 강화에 차이가 없으니 생색내기식으로 방역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무능·무책임·무대응... 한수원 불신 높다

부실시공·허술한 운영에 불법하도급까지...원전 관리 능력 의문

한빛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원전 관리·운영 과정의 무능·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대응 능력도 부실해 이대로 원전 관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양파껍질처럼...부실시공·관리부실에 불법하도급 의혹까지>한빛원전 5호기 정비 과정에서 시공 불량·관리 부실에 이어 불법으로 공인검사원(ANI)에게 하도급을 줬 검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6일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측은 5호기에 대한 제 13차 계획예방정비(2020년 4월~10월)를 위해 특정 공인검사기관과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기관이 직접 검사를 맡는 게 아니라 개인 검사원에게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인검사원은 원전 주요기기 제작 및 주요 용접 등 공정에서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해 해당 작업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한빛원전은 독립성을 위해 공인검사기관 계약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3무(무능·무책임·무대응) 한수원>한빛원전측은 이번 5호기 문제 발생 과정에서 부실한 원전

영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 (이하 검증보고서)를 내놓을 때만 해도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1과 2(69번)에서만 용접이 잘못됐고 나머지 '정상' 이라는 발표를 했었다. 원안위는 이를 뒤집어 69번 관통관 이외에도 39번의 용접부가 잘못된 사실을 밝혀냈다. 원안위 조사를 통해 한수원의 부실한 점검, 허술한 관리 능력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데도, 기존 잘못된 조사 결과를 '정상'인 것처럼 내놓은 책임은 인정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지역민들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검찰에 시공사를 고발, 시공사에게만 떠넘

기는 행태까지 보였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이같은 점을 들어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없이)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번 5호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묵살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애초 주민들과 원자로 정비과정에서 영상을 촬영, 보관하겠다고 했지만 5호기 용접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영상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권공동대응 관계자는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핵발전 시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강제추행·금품수수 기강 풀린 전남경찰 연말 비위 적발 잇따라

전남지역 경찰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연말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은 무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기각했다. 전남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 부적격 조합원 모집 묵인·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유죄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는 가하면, 계약과 다르게 용역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다. 또 운암산 황계마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C·D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행사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조합 부담으로 떠안게 해 조

합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423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해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씨는 1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221세대 중 13세대가 부적격 세대인 줄 알면서도 세대당 분양수가 1430만원을 받도록 했다. B씨도 분양대행사에게 부적격 세대인 2세대 모집에 따른 수수료 청구를 묵인했다. 이들은 2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조합원 20세대 중 12세대가 부적격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세대당 77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행사가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때문에 부과받은 과태료 2억6000만원이 부과되자 조합원들의 부담금으로 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납부한 뒤 조합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합에 손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B씨는 C·D씨와 공모, 조합 재물을 가로채고 조합에 손실을 끼쳤고 발행 경위·방법, 관여 정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A씨는 6억원, B씨는 3억7000만원의 손해를 조합에 입혔고 결국 조합원들의 손해를 이어졌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에서도 경찰 중견 간부가 사건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진행 중이다. 전남청은 최근 가장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주경찰서 B 경위가 관련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담당 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에게 빌린 돈일 뿐 청탁성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items 1 through 4.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items 1 through 4.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2. 매각기일: 2020. 12. 21.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0. 12. 28. [일] 14: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입찰장 5. 매각방법 6. 매각대금 납부방법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